

# 광주 복합쇼핑몰 3종, 경제효과 16조4412억원 분석

##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고용창출 4만7000명 슈퍼마켓·음식점 ‘맑음’… 화장품·가전 가구 ‘흐림’ 상생발전협의회 구성해 ‘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

광주에 더현대·신세계백화점·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 3종’이 들어서면 16조 441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상권별로는 슈퍼마켓과 음식점, 의류 패션 잡화 등 업종은 매출이 늘어나는 반면, 화장품과 가전 가구 생활잡화 등 업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현재 옛 전방·일신 방직 부지에 ‘더현대

광주’, 광천터미널 부지에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통한 ‘더 그레이트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가 추진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 복합쇼핑몰 3종 출점은 광주에 16조441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조성 등 시설 투자 단계는 생산유발효과 10조717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5318억원을 발생하고, 5만7123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추정했다.

점포 운영 단계는 연간 생산유발효과 5

조723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5100억원을 발생하고, 고용 창출 효과는 4만 6933명으로 분석했다.

상권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방문객이 늘어나고 주변 상권을 동시 이용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일부는 대형 점포와의 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더현대 출점 후 3년간 업종별 미치는 영향을 보면 슈퍼마켓(1.59%), 음식점(2.91%), 의류 패션 잡화(1.26%), 커피제과(2.21%), 가전 가구 생활잡화(1.68%) 업종은 매출이 늘어났다.

하지만 화장품은 신규 브랜드 출점으로 인한 경쟁으로 -3.43% 매출이 감소했다.

슈퍼마켓은 집객효과로 인해 주변점포를 동시 이용하면서, 의류 패션 잡화 업종은 브랜드, 취급 품목의 차이로 긍정적

인 영향이 더 나타났다.

가전 가구 생활잡화는 출점 초기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후 영향력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더현대 예상 방문객 3000만명으로, 이중 지역 내 거주민이 60.5%, 타 지역민이 39.5%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세계는 더현대 광주점과 경쟁 관계를 형성해 화장품, 가전 가구 생활잡화는 각각 -1.53%, -1.29% 매출이 감소했다.

나머지 슈퍼마켓(0.94%), 음식점(2.59%), 의류 패션 잡화(1.84%), 커피제과(2.07%)는 매출이 늘어났다.

연간 방문객은 2400만명으로 추정되며 지역 내 거주민은 61.95%, 타 지역민은 38.05%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필드는 의류 패션 잡화(-1.46%)를 제외하고 슈퍼마켓(2.14%), 음식점

(4.22%), 커피 제과(5.53%), 화장품(5.59%), 가전 가구 생활잡화(4.39%) 모두 매출이 늘어났다.

스타필드 내 창고형 대형마트가 출점할 경우 의류 패션 잡화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스타필드는 도심 외곽 지역에 출점해 전반적으로 인근 상권과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3000만명이 방문하고, 이 중 지역 내 거주민은 34.35%, 타 지역민은 65.65%가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복합쇼핑몰과는 소비하는 업종, 품목과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다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더현대 연 매출액은 1조1994억원, 스타필드 8000억원, 신세계백화점 9710억원으로 추산된다.

복합쇼핑몰 3종과 소상공인 상생 지원 정책으로는 광주골목포인트 발행, 상생복합시설 조성, 특별보증을 통한 지원 확대, 대규모점포와 1대 1 매칭 지원 대책이 제안됐다.

광주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상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상공인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등을 진행, 대기업·소상공인·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문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대규모점포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최적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동구협의회 평가대회·한마음 다짐대회’ 15일 오후 광주 동구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동구협의회 2025년 평가대회와 한마음 다짐대회’에 참석한 임백 동구청장과 고강진 동구협의회장 및 회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개회 및 내빈소개, 행동강령 낭독, 축사, 유공자표창,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정준호 “광주~익산~용산역 열차 환승시간 최대 26분 단축”

### 30일부터 상하행 5편 운행시간 조정…동·북구민 편의 기대

오는 30일부터 서울 용산과 광주역을 오가는 열차 이용 시간이 단축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갑·사진)은 “오는 30일부터 용산-익산-광주역을 오가는 상·하행 5편 열차의 익산역 환승 시간이 최대 26분 단축된다”고 밝혔다.

평균 31분이 소요되던 환승 대기 시간이 평균 16분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광주역 이용 승객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승차권 판매는 16일부터다.

지난 2015년 광주송정역 개칭 이후 광주역에는 KTX가 정차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역 이용 승객들은 ITX·무궁

화호 등 일반열차를 이용해 환승하면서 장시간 대기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용산-광주역 구간 이용객들은 익산역에서 일반열차로 갈아타기 위해 최대 40분, 평균 31분을 대기해야 했다. 전체 소요시간 평균 3시간 5분 중 약 6분의 1이 환승 대기시간으로 소요됐다.

환승 대기시간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광주역~광주송정역 간 서열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북구와 동구 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성은 더욱 저하됐고, 그 여파로 광주역과 인근 북구 지역 상권도 침체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북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광주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



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한 국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일반열차 5편의 운행 시간을 조정해 환승 대기 시간을 최대 26분까지 단축했다.

또 현행 광주~익산행 무궁화호를 ITX·마음 열차로 교체해 기존 1회에서 2회로 증편했으며, 광주~용산 무궁화호 2회를 ITX·새마을 열차로 변경해 승객 편의를 개선했다.

환승 개선 이후 광주 북구 갑 주민들이 ‘용산-광주송정역’ 또는 ‘용산-광주역’으로 이동할 경우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두안동 도차 기준 광주역 이용 시 교통비가 약 4300원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

타났다.

광주역 이용 시에는 익산역 열차 환승과 버스 환승을 거치며, 비용은 최소 4만 3750원(열차 4만2500원·버스 1250원), 소요 시간은 최소 3시간 1분(KTX·일반 열차 2시간 47분·버스 14분)이다.

반면 광주송정역 이용 시에는 지하철과 버스 환승을 거쳐야 하며, 비용은 4만 8050원, 소요 시간은 최소 2시간 43분(KTX 1시간 53분, 지하철·버스 50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준호 의원은 “2023년 광주역~광주송정역 서열열차 운행이 종료되면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아쉬움과 불편을 겪어 왔다”며 “대안 교통수단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 이번 개선이 이용객 증가로 이어져 광주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전남 자율주행 상용화 지형 넓어진다

### 목포까지 시범운행 확대…순천·해남 이어 3번째 목포역~산정농공단지 24km 순환노선 실증 본격화

전남도의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이 순천·해남에 이어 목포까지 넓어지며 단계적인 실증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공모에서 ‘목포 스마트 순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남에서는 순천(2022년), 해남(2023년)에 이어 3개 시·군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게 됐다.

목포 시범운행지구는 도심과 관광지, 산업거점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순환형 실증 모델로 설계됐다. 노선은 목포역을 기점으로 해양대학교, 해상케이블카, 목화체육장, 산정농공단지를 잇는 총 24km 규모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외 고령 수요가 있는 철도역, 관광객 밀집 지역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어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목포시는 해당 노선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상용화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 근로자 이동 지원과 관광 순환 교통이라는 이중 목적을 동시에 구현하는 모델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이번 목포 지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주행 실증을 한층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국민연금, 한은과 외환스와프 내년 말까지 연장

국민연금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불안속에 연발 종료 예정이었던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 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작년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

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까지로 연장했는데, 최근에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사업기간 연장 확정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발계획 변경안 의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사업기간 연장이 확정되며, 후속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신대배후단지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되며,

확정 측량 결과를 반영해 사업면적도 조정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반단지구 추가 지정 추진 상황 보고와 함께, 기존 경제자유구역 단지의 사업 일정 조정이 함께 논의됐다. 이 가운데 광양만권 신대배후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단지 조성의 불확실성

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은 사업여건 변화와 후속 사업 추진의 원활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유치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기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

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하고,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 여부와 개발계획 변경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강화남단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요청도 보고됐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를 미래기술과 지역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 아래, 바이오·퍼지컬AI·복합관광 등 신성장 산업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전략 거점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1면 ‘장성 데이터센터’서 계속

센터에서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한다. 400평 규모의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해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고, AI·클라우드 분야 전문 교육도 함께 할 계획이다.

부지 공터에는 풋살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개방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최근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오픈AI-SK 합동 글로벌 데이터센터 등 설립이 확정되면서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2019년 블루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한 이후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첨단 산업 유치를 추진한 전략이 재생에너지 100(RE100), 에너지 대전환 흐름 등과 맞물리며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많은 빅테크 기업이 전남에 AI 데이터센터 입지를 타진하고 있고, 첨단 반도체 산업까지 유치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한쪽에는 농수산업, 다른 한쪽에는 첨단산업을 육성해 양수점장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